

[토론문 1]

이유진(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1. 한국사회 분산형 지역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요소

단위	실행방안	전환의 싹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탈핵에너지 전환 명시,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마련, 전기요금체계 개편, 에너지 세제 개편, 분산형전원확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지자체로 에너지 정책 권한 이양, 상용자가발전 비중 확대,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화	2차 에기본 워킹그룹 :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제안,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자립도 명시, 지역자원 활용을 포함한 종합에너지 계획 수립과 실행체계 마련, 인력/예산/조례, 지역 에너지 공사, 지역에너지 재단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탈핵에너지 전환도시 선언 46개 지자체
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관련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자립마을, 저탄소 녹색마을

2. 독일의 에너지 전환 - 하이브리드 모델 (국가와 지역의 상호작용)

한국의 에너지 전환 - 지역 선도형 (지역의 성공적인 기후정책과 프로그램이 타 지역이나 국가 수준으로 확대), 후쿠시마 사고가 지자체에 가져다 준 변화, 시민참여 탈핵운동의 확산, 밀양 송전탑문제를 계기로 전력생산 전과정에 관한 관심 증대, 아래로부터의 인식확산

3. 재공유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한국의 전력 부문이 사유화에서 국유화로, 다시 국유화에서 부분적 사유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그래서 '재공유화'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4. 전환 실험으로 MB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은 왜 성공하지 못했으며, 그로부터 얻은 교훈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정부가 분산형에너지 정책을 펼치면서 주민주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반면 우리는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시설중심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 대한민국의 같은 농촌마을인데 밀양과 청도에서는 765kV 송전탑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정부 예산을 쏟아 자립마을을 만드는 극단이 존재.

세계최초 에너지 자립마을인 무레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협동조합을 만들어 바이오디젤, 목질계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해 에너지 자립도 190%를 달성. 평범한 농부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기까지 정부와 대학,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이 협력. 그 배경에는 1978년 다 지은 츠벤텐도르프 원전을 국민투표로 폐쇄한 이후로 정부가 지역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앞장섰기 때문.

독일은 전체 전력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데,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투자자의 40%가 시민.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면 전력회사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 정부가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펼치면서 지역별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기술, 인력, 중간지원 조직들이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 자연스럽게 등장.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없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것에는 한계.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강원도 인제군 남대리에서는 주민 주도로 남대리태양광발전영농조합법인이 만들어졌

고, 제주 화순과 경남 사천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투자해서 설립한 태양광발전소가 세워 짐. 태양광을 통한 전력생산에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스스로 운영한 사례. 한두 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는 것보다 분산형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틀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지금 진행되는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완전히 실패로만 규정할 일은 아님. 애초부터 시범사업. 마을에서 에너지 생산을 시도하면서 겪었던 제도적, 기술적, 인적 장벽들을 꼼꼼히 분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임.

5. 재지역화와 재공유화의 제도적 기초가 에너지공사여야만 하는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가?

6.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사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적 통제가 가능하고 작동하고 있는가? 지역사회의 공적 통제가 가능하려면 어떤 장치를 갖춰야 하는가? 지자체 공사에 대한 시장의 전횡을 방지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7. 서울에너지공사를 만든다면 기존의 서울도시철도공사(교통)와 SH공사(주택)로부터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는가? 지하철 9호선의 운임결정권 귀속과 시민펀드 출시 과정을 재공유화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이는 에너지 분야의 재공유화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참고> 독일 지자체 시영 전력회사 운영 : 1998년 전력시장자유화로 지자체는 전력망과 전력회사를 기업들이 운영하도록 허가했음. 최근 허가기간(대략15년)이 지나면서 지자체들은 전력망과 전력회사를 기업으로부터 환수해 시영화(기업은 전기요금 인하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에도 소극적). 2005년 이

래 72개의 지자체가 시영 전력회사 설립, 행정단위(communit) 190개가 전력회사를 다시 세움. 새롭게 들어선 지자체 소유의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열병합발전소 등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변화를 시작¹⁹⁾. 독일의 시영에너지회사는 유한회사(GmbH) 형태임. 독일의 유한회사 형태는 한국과 무엇이 다르며, 이것은 공유화의 정신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 서울시 SH집단에너지사업단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간기업에 위탁되었다가 3년 만에 서울시로 ‘반환’. 지하철 9호선 운영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큼

8.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안)²⁰⁾

□ 배경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집행체계(전문기관 설립) 구축이 시급. 기존 기후환경본부로서는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

- 석유가격 상승, 후쿠시마, 전력난 등 시민들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심도 급증함. 전기요금 상승 동향과 뽁뽁이 판매량 급증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

- 조명, 취사, 난방, 냉방, 운송 등 에너지가 필요한 각 분야에서 효율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 환경과 비용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 정책 + 주택 정책 +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정책의 수평적 결합). 에너지 정책을 통합, 조정, 집행하는 기능 극대화.

19)

<http://www.renewablesinternational.net/72-new-municipal-power-utilities-since-2005/150/537/72825/>

20) 서울에서 에너지 생산을 재지역화하기 위해 공사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메모 수준으로 구상을 해본 것임. 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방향이라고 확정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방안

- 에너지 서비스 분야의 기술개발, 실행력 제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서울에너지 공사]를 설립함. 집단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진단 업무를 맡아온 기존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²¹⁾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서비스 기능을 추가해 서울에너지공사로 설립을 추진함.

- 서울에너지공단이 아니라 서울에너지공사여야 하는 이유. ①지방공사와 공단 예결산 승인은 시장이 하고, 공사는 지자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고, 공단은 100% 출자 ②공단을 특정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이 짙고, 지방공사는 독립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 ③ 공단은 출연금 + 수탁금 + 수수료 수입으로 경영하고, 공사는 자본금 + 판매수입으로 경영해 시장 창출에 유리함

- 에너지공사 자본금은 서울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기존 열병합발전 시설과 자원회수시설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물 출자). 공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서울시 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음(시민출자를 받는 방식을 제안함).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수익금으로 공사 운영.

- 공사의 민주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함. 시민들이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에 참여하고, 시민출자를 받아 운영할 수 있어야 함. 공공성과 에너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참여거버넌스로 에너지 생산소비에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 시스템 구축. 에너지 주권의 회복.

□ 서울에너지공사 역할

- 서울시 에너지 정책 집행(원전하나줄이기), 집단에너지사업(지역냉·난방), 태양

21) 서울시는 SH집단에너지 사업단이 있음. 노원과 목동에 지역난방을 제공하고 있고, 마곡지구에도 지역난방 사업을 할 예정임. 서울시가 투자한 서울시의 자산이며, 현재 SH공사(에너지 분야에 전문성 없음)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 SH집단에너지 사업단의 주요 결정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서 결정되어 왔고,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사업단의 운영이 좌지우지 되어 온 비효율이 존재함.

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사업, 에너지효율화사업(건물 단열개선 사업 특화)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사업을 소형건물, 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ESCO 사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 에너지 관련 인력양성과 마을에너지 기업 육성 및 지원, 에너지 서비스 관련 시장 개척사업(조명, 난방, 냉방, 취사 등 분야별), 에너지 복지 분야 :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에 기여